

## 중국리스크\_아세안 진출 일본기업 지원펀드 설립

- 일본 미즈호 FG와 국제협력은행(JBIC)은 중국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 지원 펀드를 창설
- 중국 리스크 분산을 위한 제3국 진출 중요성은 향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례로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

### □ 중국 리스크 대응을 위한 일본기업 지원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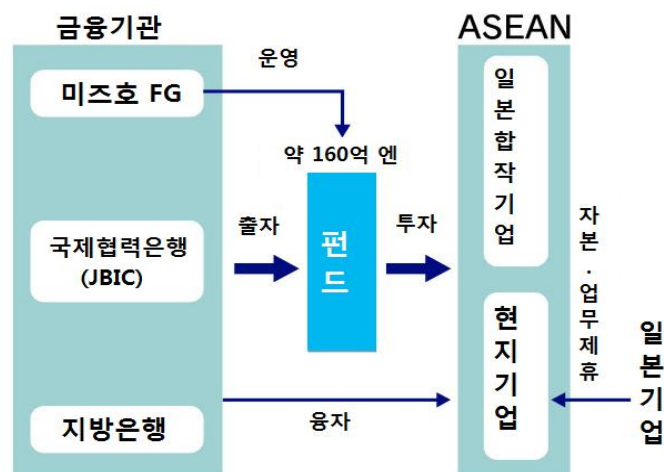
- 일본 미즈호 파이낸셜그룹(FG)과 국제협력은행(JBIC)은 아세안지역으로 진출하는 일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60억 엔 규모의 펀드를 창설하는 MOU를 체결
- 펀드 설립 배경은 중국 리스크가 커지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외의 아시아 국가들에 투자하는 ‘차이나+ $\alpha$ ’ 전략의 일환
  - '12.9월 중국의 반일 시위 영향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감소 등 경제 및 산업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
  -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일본기업들이 진출하는 국가로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

### □ 아세안으로 진출하는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

- 미즈호 FG 및 JBIC에 의한 펀드는, 일본기업과 동남아 현지기업의 합작회사에 자본을 지원하고 진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지원

- 펀드는 미즈호 코퍼레이트은행이 싱가포르에 설립하고 기금의 약 60%인 100억 엔을 출자, JBIC은 수십억 엔을 각출할 예정이며 지방은행에도 협력을 요청
- 출자 방법은 일본 중소기업들이 아세안 현지기업과 공동 출자회사를 설립 때, 자금의 일부를 지원
- 지원 금융기관은 과반 이상의 주식 취득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으로 소액주주로서 경영에 참여하게 됨

#### <아시아 진출 기업 지원 펀드의 개요>



#### <자본 지원의 조건>

회사 당 지원규모 : 5~15억 엔 (예정)
연간 지원 건수 : 2~3 건
지원 대상 업종 : 업종불문 (미즈호은행의 고객인 중소기업)
지원 기간 : 5년

출처: 일본경제신문

- 미즈호 FG와 JBIC는 해외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원기업들에게 자문을 하거나 펀드 운영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

- 미즈호 FG와 지방은행은 펀드 출자와는 별도로 설비자금 용자를 통해 경영을 지원하고 장래 일본기업이나 현지기업에 지분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환수
- 지원 금융기관은 반제할 의무가 없는 펀드 출자로 중소기업의 신용을 보완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아세안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
- 투자기업을 성장시켜 용자와 예금, 환전 업무 등 금융거래를 확대를 도모
- 미즈호 코퍼레이트은행은 필리핀의 BPI(뱅크 오브 필리핀 아일랜드)와 업무제휴를 체결
- 일본기업 진출 시 현지의 협력 기업을 소개, 진출 후 계좌 개설 및 송금 등 금융거래에 협조기로 합의
- 외자 유치를 담당하는 필리핀 경제구청과도 제휴, 필리핀의 세제 우대 정책 등의 정보를 일본기업에게 제공

## □ 시사점

- 아세안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 규모로 성장하기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, 중국 리스크 분산을 위해 민간에서 지원 펀드가 창설되었다는 점은 평가될 수 있음
- 특히 4번째로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는 중간층 확대로 자동차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, 일본의 자동차 관련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찬스가 될 것으로 예상
-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하고

있지만, 일본의 아세안 진출 기업에 대한 펀드 설치 등 지원 정책의 선행 사례로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

-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리스크 분산 전략은 필수적이고, 향후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소기업들의 제3국 진출 지원 정책도 고려해야 할 것임
- \* 한국 제조업의 직접투자 전체에서 對아세안의 비율은 '05년의 약 10%에서 '10년에는 30.8%로 급증, '12년 1~6월은 35.4%로 중국보다 높음
- \*\* 무역도 對아세안 수출이 '05년의 9.6%에서 '12년 1~10월은 14.1%까지 증가
- 일본기업들이 중국 리스크의 후보지로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정책의 강화도 추진해야 하며, 아세안 국가와 차별화된 일본기업 투자유치정책 등이 필요함

#### 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11.28, 12.3)